보 도 자 료

이 자료는 2011. 11. 24(목) 조간(인터넷: 2011. 11. 23(수) 오후 4시)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기획조정팀 이은정, 02-3775-5508	2011. 11. 22(화) 작성	총 11쪽

각국의 일자리지원 정책 사례와 향후 한국의 과제

■ 지역현실에 맞는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재량권 확대 필요

■ 직접일자리 창출정책의 수요자 친화성 제고

◈ **한국노동연구원 국제세미나: 각국의 일자리지원 정책 사례와 향후 한국의 과제**

·일 시: 2011. 11. 23(수) 13:00 ~ 18:00
·장 소: 여의도 렉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
·주 최: 한국노동연구원
·언 어: 한·영 동시통역

◈ **발표문**

1. 한국의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
윤윤규 (한국노동연구원)

2. 직접일자리 창출정책: 쟁점과 과제
이규용 (한국노동연구원)

■ 한국의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

윤윤규 (한국노동연구원)

○ 한국의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

※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결과: 지자체 설문조사 (2010.9), 우수지자체 사례조사 등

- 다양한 정부 부처별 일자리사업이 체계적인 조정 없이 지자체 관련부서로 따로 전달되고 있음. 지자체의 총괄조정 기능이 약하고 절반정도의 지자체에 총괄조정조직이 없어 일자리사업간 유사·중복, 이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집행 등 문제 발생

- 일자리사업의 사업목표나 대상집단 설정, 사업일정관리 등은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, 사업간 유사·중복, 사업지침 적절성, 목표의 지역현실 적합성, 지역 재량권, 전달단계 중복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

- 일자리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, 지자체 수준에서 업무 우선순위가 낮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과중. 업무 담당자들은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실정

○ 일자리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정책제언

-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일자리대책 조정기능의 활성화
·중앙정부의 각종 일자리사업을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으로

총괄 조정

·지자체 차원에서 각 부처의 일자리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적인 틀 구축

- 지역의 사업수요를 반영한 사업 설계 및 지역재량권 보장

·중앙정부 일자리사업 계획수립 및 지침작성 단계에서 지자체 의견수렴 메커니즘 강화로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일자리사업 수립

·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지침을 개선

-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정책우선순위 제고,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

·지자체 종합평가에서 일자리사업 성과의 비중 확대, 일자리 공시제 조기 정착

·지자체 일자리사업 담당조직에 적정인력 확보

·일자리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, 민간 전문인력 적극적 활용

- 지자체가 기업, 대학 등과 연계하고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상담·알선, 교육훈련, 취업,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모색. 이를 통해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이 일회성 단기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

■ 직접일자리 창출정책 : 쟁점과 과제

이규용 (한국노동연구원)

○ 직접일자리 창출정책의 효율화 필요

- 임시 일자리 특성에 따른 일자리 체감성 저하,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

○ 직접일자리 창출정책 개선방향

- 목표집단별 유효한 정책수단의 제공을 위해 사업의 재유형화를 통한 사업목표, 대상자 선정, 프로그램의 효율화 방안 종합점검

- 경기침체기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 및 목표집단의 매뉴얼화를 통한 효과적 대응

-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핵심인 돌봄노동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를 정비하고 직무경험과 역량에 따른 자격부여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전문화 토양을 구축

-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기능적으로 통합

- 지역수요를 반영한 중앙부처 사업추진의 유연화, 사업의 융합형 설계를 통한 기능의 전문화를 도모

◈ 별첨 (발표문 요약)

한국의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

윤윤규 (한국노동연구원)

1. 연구 목적

○ 지자체 설문조사, 우수 지역사례 조사, 자료분석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최종 실행단위인 지역으로 배분·전달·실행되는 체계를 분석하고, 일자리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일자리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

2. 한국의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

○ 한국의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와 거버넌스는 대체로 중앙정부 주도의 중앙집권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나 대내외적 환경변화나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보다 분권화된 전달체계와 파트너십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

○ 한국의 일자리사업 전달체계는 사업특성이나 소관부처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가지므로 일자리사업 유형별로 적합하고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

- 희망근로, 공공근로 등 행정안전부의 단기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침과 평가라는 틀 내에서 사업집행·전달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'지방자치단체 위임형' 전달체계를 가짐

- 사회적 일자리, 지역맞춤형 일자리 등 고용노동부 사업은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사

무소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집행될 여지를 제공하는 '지자체-지방사무소 네트워킹형' 전달체계를 가짐

3. 중앙·지역 차원의 일자리대책 조정기능 활성화

○ 지자체 일자리사업 간 유사·중복과 이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의 문제 발생

-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(2010.9),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류가 많고 예산규모가 막대하나 체계적인 조정 없이 부처별 사업이 지자체 관련 부서로 따로 전달되며, 지자체의 일자리사업 총괄조정기능이 약하고 총괄조정조직이 없는 지자체도 절반

○ 정책 제언

-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각종 일자리사업을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관련 조직과 기능을 정비

- 지역 차원에서도 상이한 전달체계를 통해 지자체로 위임되는 각 부처의 일자리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적인 틀 구축

-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일자리사업 총괄조정팀 구성·운영을 독려하고,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집단을 포괄하는 협의체(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)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

4. 지역의 사업수요를 반영한 현장기반 사업설계 및 지역재량권 보장

○ 설문조사 결과, 일자리사업은 사업목표나 대상집단 설정, 사업일정 관리 등은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지나, 사업간 유사·중복, 사업지침의 적절성, 목표의 지역현실 적합성, 지역 재량권, 전달단계 중복 등 측면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○ 정책 제언

- 중앙부처별 일자리사업 계획수립 및 지침작성 단계에서 지자체의 의견 수렴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부처간 유사·중복 일자리사업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일자리사업 수립을 촉진

- 지자체에 대해 불필요하게 세세한 지침은 지양하고,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게 응용할 수 있도록 사업재량권 확대 허용

5.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정책우선순위 제고

○ 설문조사결과, 일자리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수준에서는 업무 우선순위가 낮음

○ 정책 제언

- 지자체 종합평가 및 지방교부세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일자리사업 성과의 비중을 높이고 일자리공시제 등을 통해 지자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

6. 지자체 일자리사업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

○ 다수의 지자체에서 일자리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. 또한 업무 담당자들은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, 일자리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판단

○ 정책 제언

- 지자체 일자리사업 관련 조직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해 지자체별로 적정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
  ·단기적으로는 기간제 민간인 활용, 장기적으로 직제 및 정원 조정

-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교육훈련 및 워크숍 활성화, 민간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추진하고, 장기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직제에 고용노동 분야에 특화하여 경력을 쌓는 '고용노동직렬'을 설치·운용하는 방안을 검토

7. 일자리사업 우수 지역사례의 시사점

○ 지자체 일자리사업 담당조직이 기업, 대학과의 연계와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통해 지역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상담·알선, 교육훈련, 취업,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 모색이 필요

○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이 일회성 단기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협약 체결,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자립능력 배양 등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

직접일자리 창출정책 : 쟁점과 과제

이규용 (한국노동연구원)

1. 직접일자리 창출정책의 효율화 필요

○ 일자리 예산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('11년 기준 50.1%)하는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일자리를 제공

- 일자리 제공 및 취약계층의 소득지원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, 임시 일자리 특성에 따른 일자리 체감성 저하,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

- 수요자 관점에서의 일자리 정책 효율화 필요

2.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 활용실태

○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은 크게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비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구성됨

-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예산 비중은 '08년 82.1%에서 매년 감소추이를 보여 '10년에는 71.8%로 '11년에는 67.3%로 감소추이

○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특성 ('10년 일모아 DB 분석결과)

- 성별 참여자 비중을 보면 여성(66.1%)이 남성(33.9%)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으며

-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(43.8%)이 가장 많고, 그 외 40대(16.6%), 50대(16.3%), 20대(13.2%) 순임

- 반복참여자는 전체의 11.3%를 차지. 사회서비스 부문 내 돌봄노동사업 참여자의 반복참여율은 30.0%에 달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돌봄노동 일자리를 선택

※ 반복참여자 : 사업기간 종료 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

3.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의 쟁점과 과제

□ 목표집단별 유효한 정책수단의 제공

○ 사회서비스 일자리
- 돌봄노동 일자리 : 반복참여 허용,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능력의 향상, 양질의 일자리 제공
- 경과적 일자리 : 일자리 참여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실화 도모
- 공공재제공 일자리 : 반복참여보다는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되, 정책의 체감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별 참여기간의 탄력적 접근

○ 비(非) 사회서비스 일자리
- 경력 형성형 일자리 : 임시일자리의 특성을 유지하되, 대상자의 경력개발 및 이후의 노동시장 참여와 연계를 강조
- 일자리 일몰제형 : 공공부문의 정책수요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업평가를 통해 정규성과 비정규성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
-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 : 사회서비스의 공공재 제공과 유사

□ 경기변동과 직접일자리 창출정책의 유연화

○ 경기침체기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및 목표집단의 매뉴얼화를 통한 효과적 대응
- 경기침체기에는 대상자 선정을 '능력'이 아닌 '필요성'에 우선순위를 두어 대상자를 선정
- 공공재 제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며 돌봄노동은 경기변동기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행

□ 돌봄노동 일자리 : 바우처 vs 비바우처

○ 바우처 방식
- 지역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육성
-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체계를 정비하고 직무경험과 역량에 따른 자격부여 검토 →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전문화 토양을 구축

○ 비(非) 바우처 방식
-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숙련형성을 지원하고 개발할 수 있는 체계 구축

□ 전달체계의 효율화

○ 지역수요를 반영한 중앙부처 사업추진의 유연화, 사업의 융합형 설계를 통한 기능의 전문화를 도모 → 거버넌스 재구축